

국힘 한동훈 체제 출범... 지도부 인사 구성 '관심'

당내 갈등 수습·거대 야당 상대 정책
정책위원장·지명직 최고위원 등 임명
주요 당직자 인선도...박정훈 등 거론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
임 당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가
선전하며 '한동훈호' 지도부가 순조롭게
출범했다.

안으로는 당내 갈등 수습과 당정 관계
재정립을, 밖으로는 거대 야당을 상대해
야 하는 중책을 맡은 상황에서 한 대표가
어떤 인물들로 지도부를 꾸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
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한 대표와 최
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했
다. 한 대표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한 장동
혁·진중오 의원이 각각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장동혁·진중오 의원의 선출에 따라 한
대표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
에서 최소 4명의 우군을 확보하게 될 전망
이다. 당 대표는 지도부 9명 중 정책위의
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임명할 수 있
다.

이에 삼일천하의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
시나 분당설 등, 일각에서 제기된 '흔들
기' 논란도 당분간 불식될 것으로 보인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입장하며 한동훈 당대표 후보자와 인사하고 있다. 뉴스스

다.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
제로 전환될 수 있는데, 장동혁·진중오 의
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만으로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날 여성 최고위원 몫으로 선출된 김
민전 의원의 경우 특정 당 대표 후보를 지
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나
경원 후보와 '전략적 연대'를 내세웠던 김

재원 전 최고위원,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
이트였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최고위
원으로 선출됐다.

한 대표는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
원 1명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 인선에도 박
차를 가할 전망이다. 당 대표는 당헌·당규
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장, 사무총장, 사무
부총장(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 당
대표 비서실장·정무실장(특별보좌역),

대변인단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당내에는 전당대회 국면부터 한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30여 명의 초·재선
의원 그룹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박정훈 의원을 비
롯해 송석준(3선) 의원과 김예지·김형동
·박정하·배현진(재선) 의원, 고동진·김상
욱·김소희·유용원·정성국·한지아(초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원외에서는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과 한
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 김경술·구자룡·박은식 전 비대위
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극심하게
대립했던 친윤(친윤석열)계와의 갈등 봉
합도 한 대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 대
표의 나경원 후보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
건 공천 취소 부탁' 발언으로, 해당 사건
에 연루됐던 전·현직 의원들이 반발하기
도 했다. 이들을 고려한 '탕평책'이 당직
자 인선에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한 친한계 의원은 뉴스스에 "한동훈 지
도부는 '탕평'으로 가야 한다"며 "당이 지
금 많이 분열돼 있다. 인사에서도 상생할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한 대표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강조했던 만큼, 당을 변
화시키는 데 있어 생각이 크게 다른 분들
과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도부
선출 이후에 잡음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중
요하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분
들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선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
사이에 '원의 사무총장' 공약이 나오기도
했지만, 당 살림을 책임지는 주요 직책에
원의 인사를 임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
울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뉴스스

강위원, 양부남에 "공개 방송토론" 제안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강위원(사진) 더민주전국혁신회
의 대표가 23일 경쟁 상대인 양부남 의원
에게 공개 방송토론을 제안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당 위원장 선에
출마한 두 후보 모두 '당원 주권시대'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며 "적어도 11만 권리
당원과 140만 광주시민이 후보의 생각과
비전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전
국 민주당 당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당원 중심 광주시당의 비전을 놓고 대중
적으로 후보들이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방송토론을 통해 당의 주권자
당원들에게 광주시당의 미래를 함께 보여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양 의원이 당원 중심으로 시
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8명의



집단 운영을 표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했다.

강 대표는 "양 의원이
당원 중심을 말하면서,
또 8개 지역위원장 집
단 운영도 함께 얘기한다"며 "8명 국회의
원이 집단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역 의원
들의 요구를 두루 취합해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당원 중심이란 문구는 좋
은 액세서리라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강 대표는 당원이 예산 결정에 참
여하는 당원 참여예산제 시행, 당원 개개
인과 분기별 소통하는 광주정치 콜센터
운영, 당원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
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의 공약을 제시
했다.

강 대표는 "전국의 민주당원과 심지어
국민의힘 당원조차 '광주 민주당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당
원 주권시대 정당 운영 교과서를 만들겠
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안도걸 "자동차 개소세 감면혜택 2자녀 가구로 확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
을·사진)은 23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에 조세감면 혜택
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
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
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면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
으로 상향함으로써 다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안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제 감
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
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
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혁신당 '윤석열 부부 쌍특검' 발의

"삼부토건 추가조작도 수사"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배
포' 의혹과 건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윤석열 대
통령 부부 쌍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검찰특검 조지종식 특별위
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배우
자 건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
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 간사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동훈 전 검
사장에 대한 체널A 사건 감찰 방해·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 자택을 김만배 씨 누나가 범죄
수익을 통해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삼부토건 추가조작 의혹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무자격업체 21그
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도 겨냥했다.

또 특별검사가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 기록·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했다.

공소제기·공소유지는 대통령 퇴직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하도록 했다.

압수·수색에 있어 군사상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대통령이 특검
을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
했다.

박 의원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임기 중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며 "따라
서 혐의가 인정되면 이 사건 기록을 관할
지방 검찰청 등에 보내고 대통령이 퇴직
하면 3개월 이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
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형배 구하기' 나선 박지원, '혁신회의' 직격

"민 후보 비토, 옳지 않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
진도)은 23일 강성 진명 원외모임인 '더
민주전국혁신회의'를 겨냥해 "최고위원
경선에서 민형배 후보를 비토(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옳지 않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
자간담회를 열고 "호남을 지역구로 둔 유
일한 비수도권 후보인 민형배 의원을 도
와줬으면 좋겠다"고 민 의원 지지를 호소
했다.

박 의원은 "광주·전남·전북 관리당원들
이 움직이면 수도권 관리당원(호남 향우
들)들도 움직인다"며 "민 후보와 전북 출
신 한준호 후보 둘다 당 지도부에 들어가
야 한다. 이번에 단결해 호남정치를 복원
하자"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형배

박 의원은 "전날 밤부터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민 후보 지지
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며 "수도
권 호남 향우회에도 곧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혁신회의'를 향해
"그렇게(민 후보 반대) 하지 말라"며 전대
개입을 경고했다.

현재 광주시당위원장 선거는 양부남 의
원과 혁신회의의 강위원 상임대표간 치열
한 2파전 양상이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과 당내 최대계
파 원외 인사의 대결 구도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본산은 호남이다. 그러나 불행
하게도 지난 6년간 세번의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 최고위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며 "오는 8·18전당대회에 광주 출신 민형
배 의원이 호남 유일후보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 후보는 맨먼저 이재명 후
보를 현역의원으로서 유일 지지했다. 민
주당을 위해서 희생도 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후보로 정권교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민형배 후보라고 거
듭 말씀드립니다. 김대중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을 걸고 지지 부탁 올린다"며 거듭 민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민형배 후보는 초반 4개 지역 경선에서
최하위를 기록중이다. 서울·김선욱 기자